

CEO Information

2012. 10. 3. (제868호)

유로존 위기 진단과 기업의 대응

목차

I. 유로존 위기 현황

II. 위기 진단과 대응

III. 시사점

작성 : 김득갑 연구전문위원(3780-8034)
europe.kim@samsung.com

이종규 수석연구원

김경훈 선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요약 》

낙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드라기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국채매입 시사 발언(7/26) 이후 ECB의 新국채 매입프로그램 채택,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유럽안정화기구) 합헌 판결 등 호재가 이어지며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위기 확산을 차단할 방화벽을 갖추었다는 기대감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앞으로 방화벽이 확충되면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위기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는 국가채무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 등 3가지 위기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성질환과 같다. 이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유로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로존, 회원국, 유럽기업의 위기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유로존 차원: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정비

유로존은 방화벽 확충, 은행동맹, 재정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ECB와 ESM을 중심으로 한 방화벽 확충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MTs)에 따라 무제한 국채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10월 8일 출범 예정인 ESM도 은행 직접지원, 국채매입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ECB는 국채매입의 전제조건인 '긴축 및 구조개혁' 수위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로, ESM은 재원부족 문제로 방화벽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은행동맹의 1차 과제로 은행감독 권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6,000여개 은행의 감독권한을 ECB로 통합한다는 계획인데, 회원국 간 견해차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통합은 위기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이지만, 리스본조약과 회원국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다.

회원국 차원: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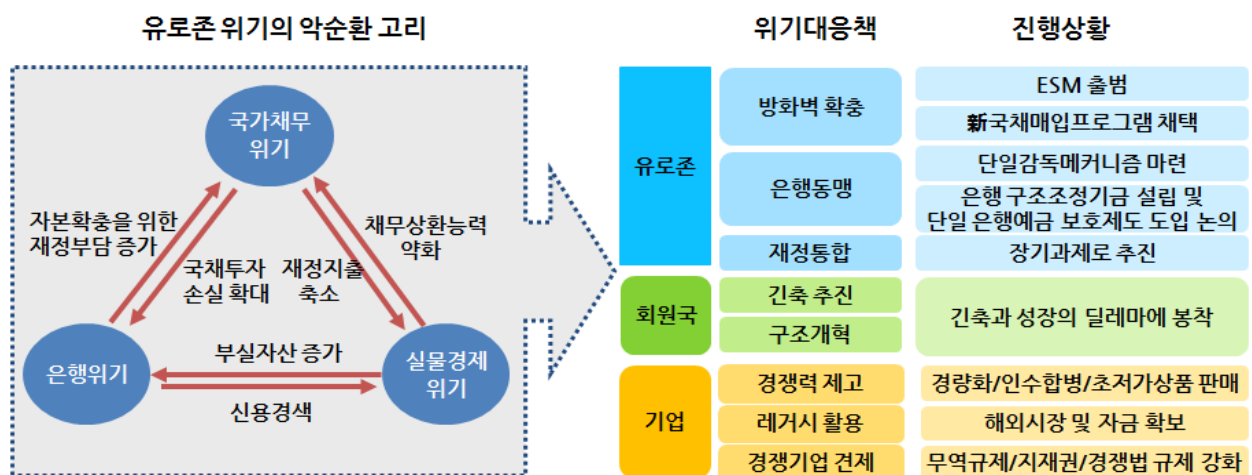
유로존 위기를 해소하려면 개별 회원국들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 3개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기 위해 긴축과 성장에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각기 상이하다. 아일랜드(성장과 긴축을 모두 충족), 포르투갈(긴축에서 성과)과 달리 성장과 긴축 모두 어려운 그리스는 지속적으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모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페인은 과다한 민간채무와 지방정부 부실 등으로 국채매입 또는 전면적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기업의 대응: 생존 돌파구 마련에 주력

유럽기업들은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로 글로벌 입지가 축소되고,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유럽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내실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시장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대응전략은 첫째, 군살 빼기다. 유럽기업들은 非핵심자산을 매각해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경량화 전략을 추진 중인데,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은 물론 인수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둘째, 레거시(legacy)를 활용한다. 유럽기업들은 침체된 내수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흥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셋째, 경쟁기업을 견제한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유럽기업들은 자국 정부 및 EU집행위를 통해 외국 경쟁기업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무역규제에서 지식재산권, 경쟁법 분야 등으로 규제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유로존 경기침체 장기화와 유럽기업 공세에 대비

한국기업은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럽기업들의 경쟁기업 견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지국 정부 및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조기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둘째, 신흥국 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경쟁격화가 예상되므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흥국 유망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직접투자(FDI),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럽기업들의 군살 빼기 전략을 사업기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유로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환경 등 신성장 분야의 원천기술은 물론 고급브랜드와 신흥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기업 M&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 준법경영 등 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을 강화해야 한다.



I. 유로존 위기 현황

최근 유로존 위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 유로존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위기감이 진정

- 6월말 EU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위기해법들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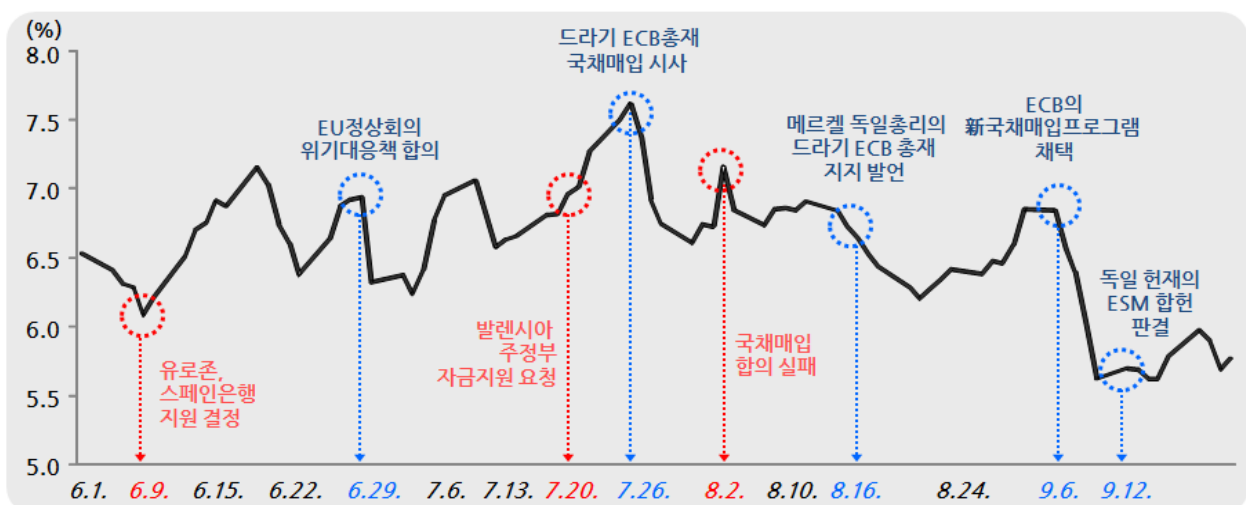
• 드라기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국채매입 시사 발언(7/26)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 발언(8/16)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ECB의 新국채매입프로그램 채택(9/6)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유럽안정화기구)¹⁾ 합헌 판결(9/12) 등도 시장 안정에 호재로 작용

- ECB의 국채매입, ESM 출범 결정 등 위기확산을 차단할 방화벽 구축이 진전되면서 재정위기국들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

•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화(7/24~9/20): 스페인 -1.9%p, 이탈리아 -1.6%p

2012년 6월 이후 스페인의 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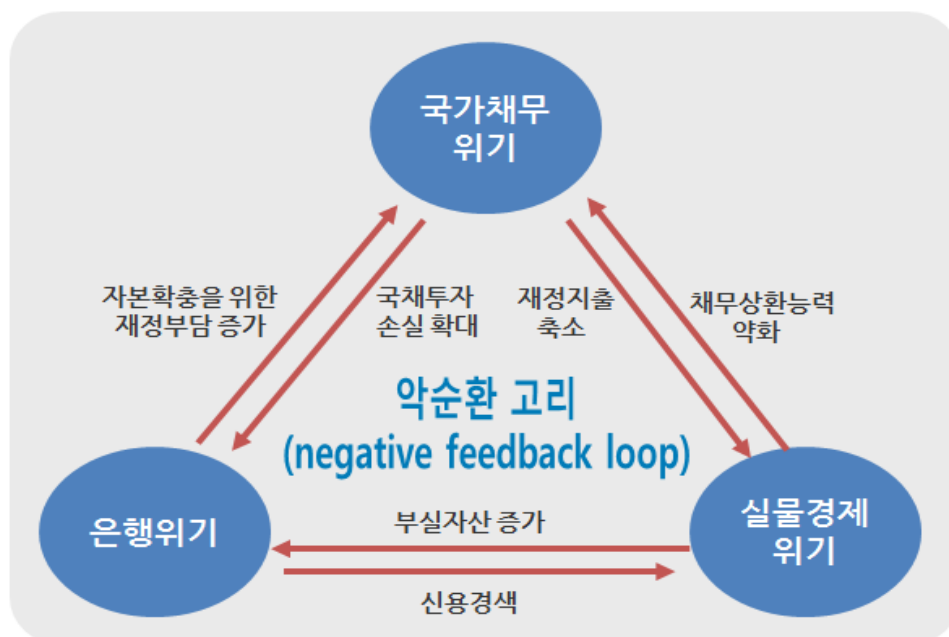
¹⁾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상설기구로 '유럽판 IMF'로 불림

그러나 유로존 위기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

□ 유로존 위기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황

- 유로존 위기는 3가지 위기가 악순환 고리(nega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만성질환
 - 국가채무위기: 재정적자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가 부도위험이 증가
 - 은행위기: 은행부실 확대로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증가하여 은행 간 자금거래가 위축되고 예금인출도 급증²⁾
 - 실물경제위기: 긴축 및 신용경색으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고용이 악화됨으로써 세수가 감소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3가지 위기 간에 형성된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이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유로존 위기는 지속

유로존 위기는 3가지 위기의 복합 현상



²⁾ 스페인은 2012년 상반기에만 2,198억유로(GDP 20%)의 자금이 인출되는 등 뱅크런이 지속

- 현재의 위기대응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
 - 재정위기국들이 겪고 있는 실물경제위기로 인해 은행위기와 국가채무 위기가 악화될 위험성이 상존
 - 방만한 재정, 경쟁력 상실, 대외 불균형 등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실물경제위기 해소가 가능
- 따라서 향후에도 유로존 위기가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방화벽 확충 등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면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위기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
 - 하지만 실물경제위기가 은행위기 및 국가채무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경제 회복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소지
 - 경제침체로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언제든지 국가채무위기가 불거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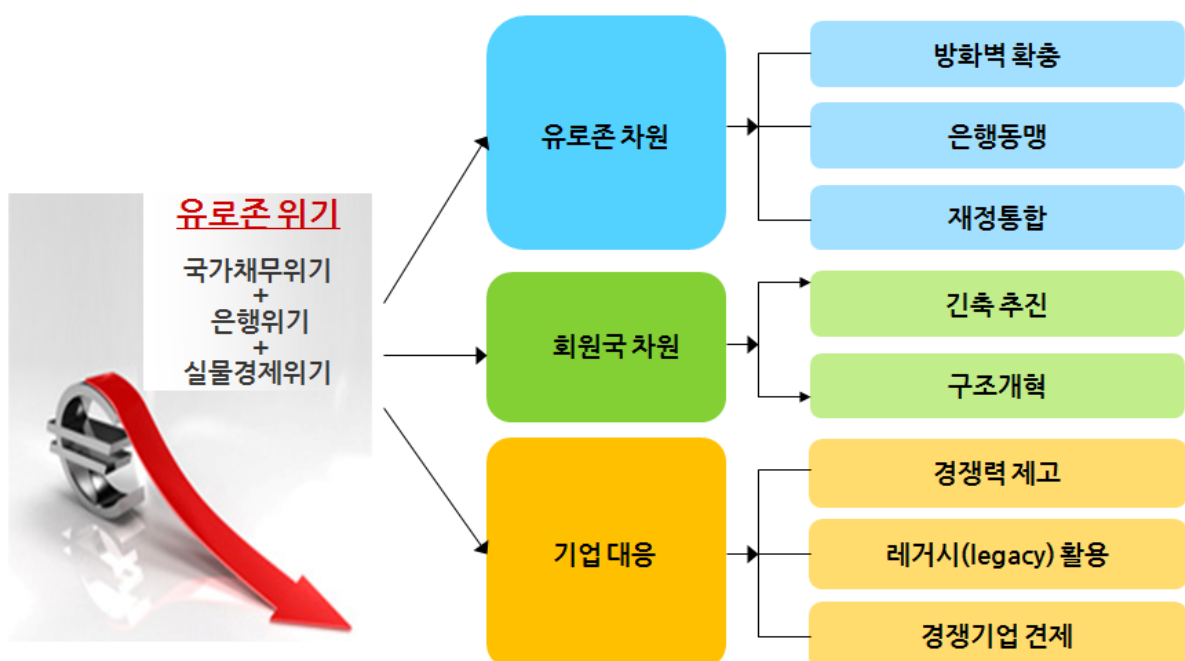
유로존 위기의 향방에 따라 대응전략을 모색

- 유로존 위기의 향방을 예측하여 한국경제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
- 현재 유로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조치들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위기국들의 긴축과 성장을 평가
 - 또한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한 유럽기업들의 대응노력을 파악하여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
 - 유럽기업들은 유로존 위기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이미 발 빠르게 대응

Ⅱ. 위기 진단과 대응

-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과 개별 회원국은 물론 기업들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
 - 유로존 차원의 대응은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확충 등 체제정비에 초점
 - 국가채무위기와 은행위기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유로존 해체 가능성을 제거
 - 개별 회원국들은 긴축과 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실물경제위기와 국가채무위기 간에 형성된 연결고리를 차단
 - 기업들은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생존 및 성장 돌파구 마련에 주력
 - 중산층 약화로 인한 수요 위축,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주체별 대응



1. 유로존 차원: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정비

□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제를 정비

- 기존의 위기대응책은 경제규모가 작은 구제금융 3개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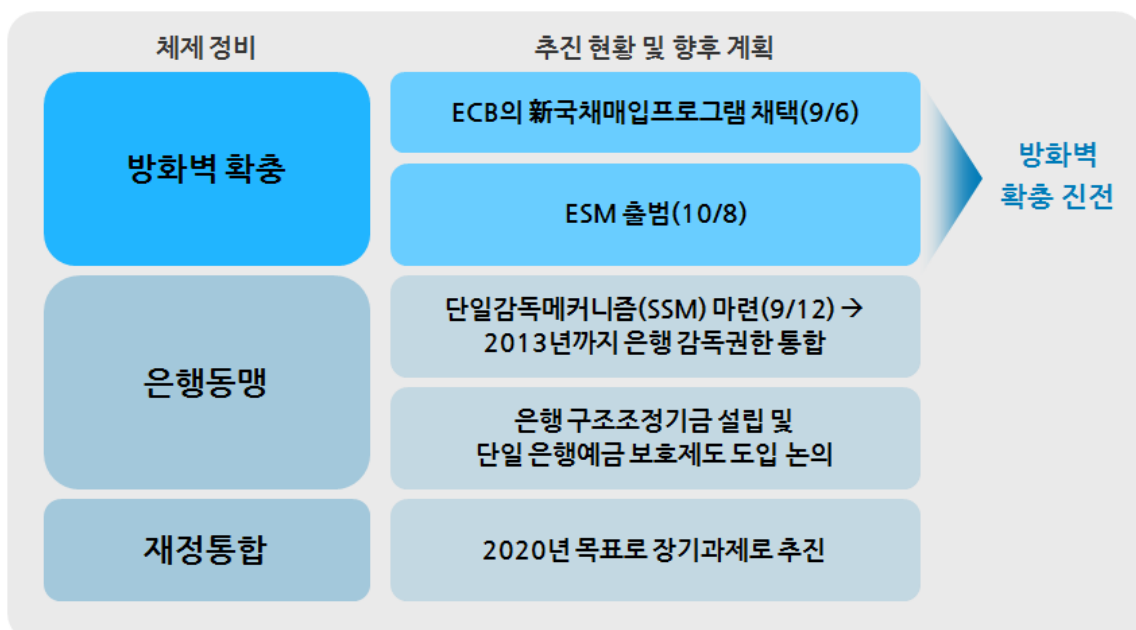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현재 가용자원(1,500억유로)은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으로는 크게 미흡하고, ECB의 위기 진정 노력도 제한적

□ 유로존 차원에서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 확충, 은행동맹, 재정통합 등 체제정비를 추진

- ECB와 ESM이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위기 해소를 위해 은행동맹을 추진 중

- 재정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건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어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정비 추진 현황



ECB와 ESM을 중심으로 방화벽 확충

□ ECB는 기존의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MTs)³⁾을 채택(9/6)

- 회원국이 엄격한 요건 충족 시 ECB가 무제한 국채매입

· 회원국 정부가 EFSF/ESM에 국채매입을 '요청'하고, '긴축 및 구조 개혁'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 ECB와 ESM이 해당국 국채를 매입⁴⁾

·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지만 회원국이 요구조건 이행에 실패할 경우 국채매입을 중단

-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ESM은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방화벽 역할을 수행

- ESM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2012년 10월 8일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

· EU정상회의(2011.12)에서 2012년 7월 ESM 출범에 합의했으나, 독일의 헌법소원 제기로 3개월 늦게 공식 출범

- ESM은 구제금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의 직접지원과 국채매입을 통해 위기확산 차단에 나설 예정

□ 하지만 ECB와 ESM을 중심으로 구축된 방화벽은 위기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긴축 및 구조개혁'의 요구조건을 둘러싼 회원국 간 견해차가 新국채 매입프로그램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³⁾ SMP(Securities Market Programme), OMTs(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⁴⁾ ECB는 유통시장에서, EFSF/ESM은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

-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국채매입 요청을 기피하게 되어 실효성을 잃게 되고, 너무 느슨할 경우 무제한 국채매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

- ESM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매입 및 은행 직접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자본금 규모가 부족⁵⁾

난항이 예상되는 은행 감독권한 통합

□ 은행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감독권한을 ECB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로 유럽은행들의 부실자산이 확대되면서 은행위기 우려가 증폭
- EU는 은행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로존의 은행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행동맹)을 추진⁶⁾
- 은행동맹의 1차 과제로 회원국의 은행 감독권한을 통합할 방침
 - 은행 감독권한의 통합은 ESM의 은행 직접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EU집행위는 2013년 말까지 유로존 내 6,000여개⁷⁾ 은행의 감독권한을 ECB로 이양하는 방안(SSM)⁸⁾을 제시(9/12)

□ 은행 감독권한의 통합이 지연될 경우 ESM의 은행 직접지원은 물론 은행동맹의 여타 작업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

⁵⁾ EFSF 재원을 포함해 최대 7,000억유로의 자본금 규모로 국채매입 및 은행 직접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해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나,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재정 부담국들의 반대가 예상

⁶⁾ EU는 은행 감독권한의 통합에 이어 은행 구조조정기금 설립, 단일 은행예금 보호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동맹을 완성할 계획

⁷⁾ EU집행위가 대형은행은 물론 중소 저축은행들까지 감독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독일의 감독권한 이양 은행 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총 1,885개로 증가

⁸⁾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 추진 일정⁹⁾, 감독 범위, ECB 역할, 감독메커니즘 등에 대해 회원국 간의 견해차로 난항이 예상

- EU집행위의 계획은 중소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

유럽은행들의 경영실적 악화로 신용경색 장기화 우려

- ▷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2012년 유럽은행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
 - 2012년 2/4분기 도이체방크(독일)와 BNP파리바(프랑스)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46%, 13% 감소
- ▷ 유럽은행들의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소지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대출규모가 큰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금융권 규제 강화로 은행 경영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은행규제 강화로 유럽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약 10%에서 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Chumakova, D. (2012). Day of reckoning for European retail banking. Mckinsey.

재정통합은 장기 추진과제로 논의

□ 재정통합은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

- 시장에서는 재정통합을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인식

- 재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원국 예산정책의 사전 조율, 유로본드 혹은 유로빌 발행, 유럽채무변제기금 설립, 재정이전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

- 하지만 채무 공동화¹⁰⁾를 전제로 한 대부분의 재정통합은 리스본조약¹¹⁾과 회원국 헌법의 개정 사안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이 어려울 전망

- EU는 2020년 '진정한 경제통화동맹'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재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

⁹⁾ 추진 일정은 감독권한 이양방안 승인(2012년 12월) → 대형은행의 감독권한 이양(2013년 6월) → 중소은행의 감독권한 이양(201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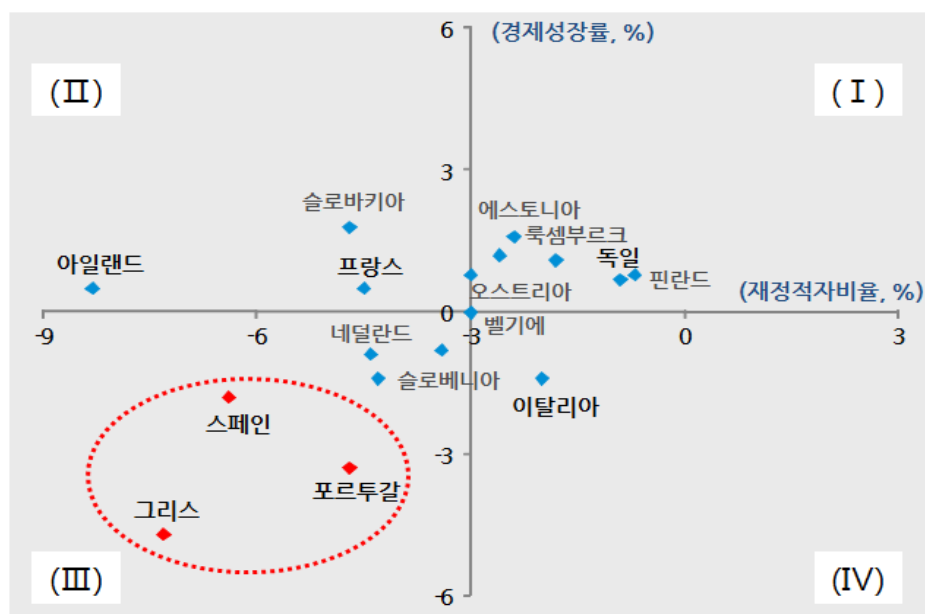
¹⁰⁾ 채무 공동화(debt mutualisation)는 채무의 연대책임을 의미

¹¹⁾ 리스본조약 제125조에 회원국 간 직접 구제금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

2. 회원국 차원: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

-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로존 회원국은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
 - 구제금융과 국채매입의 전제조건인 고강도 긴축을 이행해야 하며, 단위노동비용 억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이 필요
- 하지만 위기 해소의 핵심인 재정위기국은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긴축과 성장의 딜레마'에 봉착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남유럽 4개국¹²⁾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목표 하향 조정 및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스페인(목표시한 1년 연장), 그리스(목표시한 2년 연장 요청), 포르투갈(목표 하향 조정)

2012년 유로존 회원국의 성장 및 재정적자 전망



주: 1) X축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0% 기준; Y축은 성장률 0% 기준

- 2) I: 성장과 재정 모두 양호한 그룹; II: 재정적자 비율이 높으나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있는 그룹; III: 성장과 재정적자 모두 저조한 그룹; IV: 재정적자 비율이 높지 않으나 경기침체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자료: Eurostat

¹²⁾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엇갈리는 재정위기 5개국의 성과

- 구제금융 3개국과 유로존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긴축과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국가별로 상이
 - 성장과 긴축을 모두 충족한 아일랜드, 성장에서 고전하는 포르투갈, 성장과 긴축 모두 어려운 그리스로 구분
 - 유로존 내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성장 측면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각기 불안요인까지 가중
- 긴축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달리 그리스는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
 - **[아일랜드]** 재정위기 5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재정적자 감축안을 충실이 이행하면서 긴축 목표를 달성¹³⁾
 - 평균노동비용이 유로존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이후 생산성이 향상됐고, 최근 수출도 호조를 보여 경제성장에 일조
 - **[포르투갈]** 긴축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어 긴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입장
 -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경제에 부담
 - **[그리스]** 성장과 긴축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3차 구제금융 또는 유로존 탈퇴(Grexit)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
 - 단기적으로 315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유동성 위기¹⁴⁾가 재현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부채비율 12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¹³⁾ 2015년부터는 국가채무도 감소세를 보일 전망

¹⁴⁾ 향후 2년간 정부지출 115억유로의 삭감안을 제시해야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정치적 합의에 난항

□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의 취약성까지 부각

- [스페인] 은행부문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민간채무와 지방정부 부실로 국채매입 또는 전면적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

• 지방유동성기금(FLA)¹⁵⁾의 규모가 부족하여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

- [이탈리아] 재정적자 비율이 높지 않고 국채 만기기간이 길지만 과도한 국가채무와 성장잠재력 약화로 외부충격에 취약

• 남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되면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높은 국가채무 비율과 이자비용, 정치적 리더십 약화 등이 부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대응 능력 비교

(단위: %, 억유로)

구분	재정수지 (기초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	GDP 대비 대외순부채 비율	은행자본확충 필요액	외환보유액
스페인	-6.0 (-3.6)	72.1	285	93	262	414
이탈리아	-2.4 (+3.0)	123.3	163	23	154	1,403

주: 2012년 전망치

자료: Eurostat

□ 재정위기국의 성장이 후퇴하면서 긴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유럽 4개국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특히, 성장과 긴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유로존 차원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는 한편, 추가 긴축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

¹⁵⁾ 지방유동성기금(FLA)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FLA의 자금은 180억유로인데 카탈루냐(50억유로), 발렌시아(45억유로), 안달루시아(10억유로), 무르시아(3억유로) 등은 이미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총 108억유로)

3. 유럽기업의 대응: 생존 돌파구 마련에 주력

유로존 위기 속에서 유럽기업들은 생존본능을 발휘

□ 유럽기업들은 유로존 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

- 유럽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수요가 위축

· "향후 1년간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¹⁶⁾:

그리스 69% > 이탈리아 60% > 스페인 51% > 독일 및 프랑스 49% >
세계 평균 47%

- 유럽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위축

· 2011년 포춘 500대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 미국 6.6% > 중국
4.8% > EU 3.8% > 일본 1.9%

· 포춘 500대 기업 수(2008→2012년): EU(173→121개사),
미국(153→132개사), 일본(64→68개사), 중국(29→73개사)

- 시장 위축과 함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악화 등으로 유로존 기업의
도산 건수가 증가

· 2012년 유로존 기업의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 예상¹⁷⁾

□ 유럽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내실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 확보
노력도 강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사업 및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균살 빼기 전략을 추진

- 유럽기업들은 자국시장에서 경쟁기업들을 견제하는 한편, 위축된
내수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

¹⁶⁾ Bascle, I. et al. (2012). Tracking consumers through Europe's debt crisis. The Boston Consulting Group.

¹⁷⁾ Euler Hermes (2012). World economy is walking a tight rope.

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살 빼기

□ 유럽기업들은 非핵심자산을 매각해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경량화 전략을 추진

- 유럽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매각을 추진

• BCG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사업매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유럽기업 CEO 비율이 25%에 달함¹⁸⁾

• 이탈리아 2대 복합기업인 핀메카니카는 경영이 악화되자 에너지 설비회사인 안살도 에너지아를 지멘스(독)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

□ 유럽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수합병을 단행

- 경영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자들의 부상에 대비해 유럽기업들은 인수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모색

• 이베리아(스페인)와 브리티시에어웨이(영)는 2011년 합병을 통해 유럽 3위 규모의 항공사로 부상하였고, 2016년부터 연 4억유로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이 중 60%는 비용절감 효과)

□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겨냥해 초저가상품 판매에 주력

- 소용량 생활용품과 자사브랜드(Private Brand) 상품의 판매에 집중

• 이탈리아에서는 대규모 구매보다는 카르푸익스프레스(프) 등 소형 슈퍼마켓에서 할인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

-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적당한 가격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패턴의 변화를 유도

• 세인즈베리(영)는 낮은 가격에 높은 질의 식사를 하기 위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자는 "Live well for less" 캠페인을 전개

¹⁸⁾ Kengelbach, J. et al. (2012). Plant and Prune: How M&A can grow portfolio value. The Boston Consulting Group.

② 레거시(Legacy)¹⁹⁾를 활용해 해외시장 및 자금 확보

- 유럽기업들은 침체된 내수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신흥국 시장을 적극 공략
 -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은 식민지 시절 구축한 정치적 관계,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북아프리카 진출을 강화
 - 르노(佛)는 유럽 내 생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2012년 모로코에 북아프리카 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신설
 - 에니를 비롯한 이탈리아 기업들은 리비아와의 오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리비아 내전 이후 에너지 개발 및 재건사업을 선점
 - 스페인 건설업체들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과거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에 집중 진출²⁰⁾
- 시장뿐만 아니라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옛 식민지 국가들을 활용
 -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²¹⁾을 겪는 유럽기업들은 새로운 자금원으로 신흥국을 적극 공략
 -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는 멕시코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고, 포르투갈텔레콤은 브라질 국영은행인 방코도브라질로부터 1억유로의 자금을 유치

포르투갈의 新엘도라도: 앙골라

- ▷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기업들은 400여년간 식민통치를 했던 앙골라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직면한 아모림(에너지), 밀레니엄BCP(은행) 등 포르투갈 기업들은 앙골라 기업들에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
 - 포르투갈 금융기관과 에너지기업의 앙골라 투자유치 규모는 포르투갈 시가총액의 4% 수준인 것으로 파악

(자료: L' Angola au secours du Portugal. (2012.5.). *Le Monde diplomatique*.)

¹⁹⁾ 레거시(Legacy)란 과거 역사적 관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

²⁰⁾ 스페인 건설업계의 해외매출 중 중남미 비중이 2009년 12.3%에서 2011년 18.6%로 증가

²¹⁾ 2012년 8월 기준 유로존 은행들의 기업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3% 감소 (As Europe's banks stall, companies look afar. (2012.8.28.). *The Wall Street Journal*.)

③ 정부의 기업규제를 통한 경쟁기업 견제

□ 경영난에 처한 유럽기업들은 자국 정부 및 EU집행위를 통해 경쟁기업 견제를 강화

- 유럽기업들은 저가 제품을 앞세운 신흥국기업의 시장 잠식을 우려해 EU집행위에 신흥국 제품에 대한 덤핑혐의 등의 조사를 요청
 - 2012년 EU집행위의 수입품 조사 가운데 중국 15건, 인도 5건, 태국 5건, 대만 4건 등으로 신흥국이 대부분을 차지 (9/21 기준)
- 고용유발효과가 큰 자동차산업과 신성장 분야인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유럽기업들의 규제 요구가 증가
 - 솔라월드(독) 등 EU의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패널가격 하락을 주도한 중국 업체들을 제소함에 따라 EU집행위가 반덤핑 조사에 착수²²⁾
 - 푸조(프) 등 경영난에 빠진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프랑스 정부는 한-EU FTA 발효 이후 급증한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EU집행위가 모니터링에 나서줄 것을 요청

□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 분야 등으로 규제영역이 확대

- 유럽기업들이 신성장산업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견제를 강화
 - 오스람(독)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LE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EU집행위도 최근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기업을 압박
 - 구글, MS 등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고, 독점지위 남용 확정 시 최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

²²⁾ EU 태양광 패널업체 모임인 프로션은 중국기업들이 가격을 60~90% 낮춰 덤핑 판매했다고 지적 (Europe Investigates Chinese Solar Panels. (2012.9.6.). *The New York Times*.)

Ⅲ. 시사점

유로존 경기침체 장기화와 유럽기업 공세에 대비

□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재점검

-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유럽 내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될 전망²³⁾
 - 최악의 위기 발생 위험성은 낮아졌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불안요인이 상존
- 경영환경 악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 중산층 약화, 소비패턴 변화 등에 적절히 대처해야만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이 가능

유니레버의 소용량 생활용품 판매전략

- ▷ 유니레버(네덜란드/영)는 개발도상국에서 성공한 마케팅 방식을 유로존 재정 위기국에도 도입
 - "유럽에 빈곤의 시대가 도래" (유니레버 유럽 담당 CEO)
 - 스페인에서는 세제를, 그리스에서는 마요네즈를 소용량으로 판매

□ 유럽기업들의 경쟁기업 견제에 대비

- 유럽기업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외국 경쟁기업에 대한 견제가 무역규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경쟁법, 환경규제 등으로 확대될 조짐
 - 유럽의 각국 정부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
- 따라서 현지국 정부와 경쟁업체들의 규제 및 견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²³⁾ 유럽 경영자들 중 62%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자국이 경기침체에 직면했고, 64%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Roland Berger (2012.9.). Restructuring Survey 2012.)

□ 신흥국 시장에서 유럽기업들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

- 유럽기업들이 신흥국 진출을 본격화할 경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
 - 유럽기업들이 오랜 식민지 관계를 통해 구축한 레거시를 활용하면 신흥국에서 경쟁우위를 조기 확보 가능
 - EU가 현재 적극 추진 중인 아세안, 인도, 메르코수르 등 신흥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유럽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임
- 이에 한국기업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흥국 유망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직접투자(FDI), 기업 인수 등으로 사업기반을 강화할 필요

유로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발휘

□ 유럽기업들의 군살 빼기 전략을 사업기반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

- 위기의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유럽기업들이 계속 증가할 전망
 - 그동안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왔던 제약, 친환경 산업 등의 보조금 지급 축소로 존립기반이 약화될 가능성
- 원천기술, 고급브랜드, 신흥국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기업 M&A를 적극 활용
 - 특히 유럽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 주목

윤리경영 등 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을 강화

-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면 평상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 非윤리, 非친환경 기업 등으로 낙인 찍힐 경우 EU라는 거대 선진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 철저한 준법경영으로 유럽 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기업에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 현지국의 법체제와 국민정서에 맞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실천

- 높은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중요

지멘스의 준법경영


- ▷ 지멘스는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신흥국의 거래업체,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10억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2008년)
- ▷ 퇴서 회장 취임 이후 클린비즈니스를 표방하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 전담 준법감시인 제도(세계 600명)로 준법프로세스를 기초부터 재점검하고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비영리기관을 지원(1억달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개선

□ 유럽 내 친화력을 강화하고 反외국기업 정서를 완화

- 현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이질감을 극복하는 한편, 현지 정부 및 시민과의 유대감 형성을 도모

- 유럽에서는 환경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이슈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적절한 사회공헌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현지에서 역량 있는 경영자를 확보해 스타로 키워서 외국기업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

□ 유로존 위기를 진정한 일류기업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

- 경영환경 악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여 체질 강화 및 신성장사업 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동참하는 등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필요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9. 21	9. 24	9. 25	9. 26	9. 27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19.00	1,120.50	1,119.30	1,121.10	1,116.20
	엔/달러(뉴욕시장)	78.280	78.135	77.850	77.790	77.700
	달러/유로(뉴욕시장)	1.29740	1.29740	1.29330	1.28980	1.28760
금리	회사채(3년AA-, %)	3.34	3.32	3.31	3.30	3.32
	국고채(3년, %)	2.84	2.81	2.80	2.79	2.81
	CD (91일, %)	3.12	3.12	3.11	3.10	3.10
	LIBOR (3개월, %)	0.36925	0.36725	0.36350	0.36225	0.36025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08.18	108.17	108.61	107.64	108.09
	WTI(S, \$/배럴)	92.77	91.83	91.07	89.90	91.97
	CRB 현물가격지수	492.49	495.09	496.64	496.2	..
주가지수(KOSPI, 증가)		2,002.37	2,003.44	1,991.41	1,980.44	1,988.70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81	87	90	91	86

< 월별 지표 >

	2010년	2011년	2012.4월	2012.5월	2012.6월	2012.7월	2012.8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16.8	7.0	0.1	2.9	1.6	0.1	0.3
평균가동률	80.9	79.9	79.2	79.3	78.1	77.0	73.8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9	3.3	1.0	2.4	1.4	1.4	0.6
실업률	3.7	3.4	3.5	3.1	3.2	3.1	3.0
실업자(만명)	92.0	85.5	89.5	80.7	82.2	79.5	76.4
총취업자 수(만명)	2,382.9	2,424.4	2,475.8	2,513.3	2,511.7	2,510.6	2,485.9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4.0	2.5	2.5	2.2	1.5	1.2
생산자물가 상승률	3.8	6.1	2.4	1.9	0.8	-0.1	0.3
생활물가 상승률	3.4	4.4	2.0	2.2	1.8	0.8	0.6
수출(억달러, FOB) ²⁾	4,663.8	5,552.1	461.1	469.3	471.8	446.8	429.7
(증감률)	(28.3)	(19.0)	(-5.0)	(-0.8)	(0.9)	(-8.7)	(-6.2)
수입(억달러, CIF)	4,252.1	5,244.1	440.2	446.3	421.1	418.9	409.8
(증감률)	(31.6)	(23.3)	(-0.4)	(-1.4)	(-6.1)	(-5.4)	(-9.7)
외환보유액(억달러)	2,915.7	3,064.0	3,168.4	3,108.7	3,123.8	3,143.5	3,168.8

1) 통계청 (2012. 9. 28.) “2012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2. 9. 17.) “2012년 8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GDP 성장률 ¹⁾	6.3	3.6	3.5	3.6	3.3	2.8	2.4
민간소비	4.4	2.3	3.0	2.1	1.1	1.6	1.2
설비투자	25.7	3.7	7.7	1.2	-3.3	8.6	-2.9
건설투자	-3.7	-5.0	-4.2	-4.0	-2.1	1.5	-1.4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1.8	45.4	47.2	47.5	45.4	44.2	46.6
SERI 경제행복도지수 ²⁾ (연간은 연말 기준)	0.658	..	0.689	0.693
개인금융자산(조원) ³⁾	2,187.9	2,303.4	2,275.7	2,234.4	2,303.4	2,365.3	2,384.8
개인금융부채(조원)	1,016.6	1,103.5	1,055.0	1,074.0	1,103.5	1,106.9	1,121.4
채정수지(조원)	16.7	18.6	-2.3	16.8	18.6	-11.3	-11.5
경상수지(억달러) ⁴⁾	293.9	265.1	54.9	69.0	115.1	25.6	111.4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⁵⁾	3,594	3,984	3,993	3,956	3,984	4,126	4,186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0년	2011년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3.0	1.7	2.5	1.3	4.1	2.0	1.5
	실업률 ²⁾	9.6	9.0	9.1	9.0	8.5	8.2	8.2
	소비자물가 ²⁾	1.6	3.2	3.6	3.9	3.0	2.7	1.7
일본	GDP 성장률 ¹⁾	4.4	-0.7	-1.9	7.4	0.3	5.5	1.4
	실업률 ²⁾	5.1	4.6	4.7	4.2	4.5	4.5	4.3
	소비자물가 ²⁾	-0.7	-0.3	-0.4	0.0	-0.2	0.5	-0.2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1.9	1.5	0.2	0.1	-0.3	0.0	-0.2
	실업률 ²⁾	10.1	10.2	10.0	10.4	10.7	11.0	11.2
	소비자물가 ²⁾	1.6	2.7	2.7	3.0	2.7	2.7	2.4
중국	GDP 성장률 ¹⁾	10.4	9.2	9.5	9.1	8.9	8.1	7.6
	실업률 ²⁾	4.1	4.1	4.1	4.1	4.1	4.1	4.1
	소비자물가 ²⁾	3.3	5.4	6.4	6.1	4.1	3.6	2.2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